

# 그람시주의가 제창하는 《시민사회론》의 반동성

최 평 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리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조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증보판 500페이지)

자본주의사회의 심각한 모순과 대립의 관계를 가리우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이 퍼뜨리는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조류들 가운데는 우경기회주의적사상조류인 그람시주의도 있다.

그람시주의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가 내놓은 개량주의적이며 절충주의적인 《리론》들이 그후 1970년대말~80년대초에 이르러 서유럽의 그람시리론의 신봉자들에 의하여 더욱 개악되고 그람시주의로 명명되어 자본주의나라들에 대대적으로 류포된 우경기회주의적사상조류이다.

그람시주의의 기본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시민사회론》은 이탈리아의 그람시에 의하여 처음 제창되고 서유럽의 우경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부인하는데 리용되어온 반동적인 기회주의리론이다.

그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여본다면 완전히 추상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사회를 《정치사회》(《자본주의국가》)와 《시민사회》로 구분하여본데 기초하여 자본주의제도를 혁명적폭력으로 뒤집어엎을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국가》를 《시민사회》에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민사회》란 《법칙적으로 보장되고 민주주의적으로 조직된》 다양

한 제도와 집단들로 구성되는 《비국가령역》 다시말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조합, 결사, 교회, 학교, 언론기관, 정보전달기관, 문화기관들을 비롯한 《이데올로기적, 사회적기구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완전히 비과학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비과학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전개된 《시민사회론》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부인하는 반동적리론으로 부르조아지들에게 복무하여왔다.

《시민사회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성격을 외국함으로써 혁명투쟁의 목적과 혁명력량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리론이라는데 있다.

해당 사회의 계급적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사회에서 수행하게 되는 혁명의 성격과 원인 그리고 동력과 대상 등 혁명리론전개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이 좌우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계급적성격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어느 계급이 장악하고있는가에 따라 규정되게 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반동적인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손에 장악된 사회는 착취계급사회로 되지만 이와 반대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된 사회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사회로 되게 된다. 이로부터 인류사회의 모든 형태의 사회들은 계급적성격에 있어서 착취계급사회와 사회주의사회로 구분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론》자들은 자본주의사회를 그 무슨 《시민사회》라고 규정하고있다.

《시민사회론》의 제창자들은 현시기 자본주의사회가 《시민사회》로서 그 구성상으로 볼 때 《신중산계급이 랑계급의 잔여집

단이 아니라 독자적인 계급》으로 존재하는 3층 또는 다층모델로 이루어진 사회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사회정치적변혁은 시민이 해계모니를 행사하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적변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민사회론》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자체를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그 분리의 유지우에서량자간의 《상호의존적인 이중적민주화》를 도모할것을 주장한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국가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 따라 《시민》들은 자본주의국가를 《리해》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너그럽게 대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으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혁명투쟁의 목적을 모호하게 하려는 기회주의적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사회론》자들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적변혁》의 《기본력량》으로 지식인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의 중산계층들을 내세우고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산계층들이 《민주주의적변혁》의 《기본력량》으로 되게 되는것은 바로 그들이 《비판력이 강한 사회계층》이기때문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사회적변혁운동의 기본력량》으로 사회의 중산계층을 내세우는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력사적으로 부르쵸아철학과 사회학은 물론 우경기회주의적사조들은 레외없이 지식인을 비롯한 사회의 중산계층을 《사회적변혁운동의 기본력량》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다 그것들이 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변혁을 부인하는 자본주의변호론이기때문이다. 《시민사회론》역시 여기에서 레외로 될수 없다.

《시민사회론》자들이 《사회적변혁운동의 기본력량》으로 사회의 중산계층을 내세우는것은 결국 이 이론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력사적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부인하고 혁명력량

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반동적리론이며 자본주의변호론이라는것을 보여줄뿐이다.

《시민사회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의회투쟁》(《선거사회주의의 길》)을 제창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혁명적폭력으로 뒤집어엎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방법을 부인하는 리론이라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억속과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혁명적폭력투쟁은 착취계급사회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억속과 착취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투쟁방법이다. 그것은 그 어떤 착취계급도 인민대중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사해주지 않으며 저들의 향락과 치부를 반동적폭력에 의거하여 보장하는 착취체도를 순순히 포기하지 않기때문이다.

착취체도가 반동적폭력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기때문에 혁명적폭력투쟁에 의해서만 전복될수 있다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장구한 혁명투쟁력사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바로 이런 리유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들에서는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혁명적원칙을 변함없이 내세우고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론》의 제창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들을 《과격혁명론》이라고 비방중상하면서 《시민사회》에 알맞는 《운동》 다시말하여 《의회투쟁》(《선거사회주의의 길》)을 통해 《인간해방》이 실현된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설교하고있다.

이것은 《시민사회론》이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반동적인 리론이라는것을 잘 보여준다.

《시민사회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부르쵸아정치리념인 《자유민주주의》

를 적극 찬양함으로써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고 변호하는 리론이라는데 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시민사회론》은 다양한 색채를 띠고 나타나고있지만 그 공통적특징은 현대자본주의의 정치리념의 하나인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외우면서 자본주의제도를 적극 미화분식한다는 데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현대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격의 존중》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여주는 《민주주의》로 적극 찬양하며 저들의 반동통치리념으로 내세우고있는 극악한 부르쥔아정치리념이다.

그런데 《시민사회론》의 제창자들은 《인간은 모두 동일한 인간 및 인격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것이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첫째가는 조항》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격의 존중》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밀에서만 실현될수 있다고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대독점부르쥔아지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성격을 외면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공개적인 투항을 내놓고 설교하는 반동적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로 사람들의 인격이 존중되려면 그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주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 반동적지배계급, 착취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사회제도로써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요구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시민사회론》자들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제창자들이 웨치는 《자유》, 《평등》역시 자본주의제도를 비호하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자유》와 《평등》의 구호는 봉건사회말기 신흥부르쥔아지들이 저들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들고나온 구호로서 그것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권리상 자

유롭고 평등하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르쥔아계급이 정치적지배권을 확립한 이후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구호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부르쥔아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로 리용되게 되었으며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부르쥔아적관점에 기초하여 날이 갈수록 그 내용이 더욱 반동적인것으로 개악되고있다.

실지로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구호는 인민대중을 부르쥔아법의 희생물로 만들고 최대한의 리운을 추구하는 부르쥔아지들의 착취를 합리화하는데 적극 리용되고있다.

《자유민주주의》제창자들은 사람에 대한 부르쥔아적관점에 기초하여 사람은 《선협적인 자유》를 본성으로 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떠벌이고있다. 이자들이 떠벌이는 《선협적인 자유》란 다름아닌 무제한한 방종과 방탕, 탐욕으로 특징지어지는 부르쥔아지들의 실존주의적《자유》이다.

물론 사람들은 자유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사회론》자들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제창자들이 떠벌이는 부르쥔아지의 실존주의적《자유》인것이 아니라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된 상태이다.

무제한한 방종과 방탕, 탐욕을 조장하는 실존주의적《자유》가 사회적인간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파렴치한 외곡이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고유한 사회법칙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로 미화분식하는 자본주의변호론적궤변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반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임으로써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해 나가야 할것이다.